

# 교양교육 혁신을 위한 지방 정부와 대학 협력의 가능성 모색 : ‘권역별 연합 모형’을 제안하며



박 지 윤 (우석대학교)  
(prof.jiyoopark@gmail.com)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지방 정부와 대학의 협력을 통해 교양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지역 대학이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 간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권역별 연합 모형’을 제안하며, 지역 대학들이 협력하여 교육 자원을 공유하고,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지방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전북권 JST 공유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 협력 모델의 실효성을 분석하며,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협력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대학 간 협력은 단순히 학점 교류를 넘어, 지역 사회와 연계된 고등교육 모델로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대학의 생존과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주제어: 권역별 연합 모형, 지방 정부, 지역 대학, 대학 협력, JST 공유대학, 교양교육

## I. 서론

한국의 고등교육은 근본적인 변화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장기적 요인에 더해, 4차 산업혁명과 COVID-19 팬데믹이라는 급격한 변화로 삼중고를 겪으며, 대학 운영과 교육 방식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는 지역 대학<sup>1)</sup>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 대학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6년 기준으로 지역 대학의 자체 재정 비율은 수도권 대학 대비 약 70% 수준이었으나, 2018년에는 46.8%로 감소하였다(대학교육연구소 2020)<sup>2)</sup>. 이는 지역 대학의 재정적 독립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대학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장된다. 대학은 지역 내 교육적·문화적 중심지로서 기능하며, 지역 주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 하지만 지역 대학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는 곧 지역 사회의 공동화(空洞化)<sup>3)</sup>를 가속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 대학은 단순히 학생을 교육하는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지역 사회와의 밀접한 연계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도 해야 한다. 대학은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와 전략을 제시하는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역 내 일자리

- 1) '지방 대학'이라는 용어와 '지역 대학'이라는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르다. '지방 대학'은 주로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대학을 지칭하는 용어인 반면, '지역 대학'은 특정 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의미하는, 보다 중립적인 용어다. 특히, 한국에서 '지방 대학'이라는 개념은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맥락에서 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낮은 서열의 대학이라는 인식을 형성(염민호, 2020:221)하기도 한다. '지역 대학'은 각 지역의 특성을 강조하고 지역 발전의 주체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하므로 본고에서는 앞으로 '지역 대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2) 이는 지역 대학과 수도권 대학 간의 재정 격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벌어졌음을 보여준다. 1996년에 지역 대학의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이 수도권 대학의 70%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2018년에는 그 비율이 46.8%로 떨어졌다. 이는 20년 동안 지역 대학의 재정 상황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악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지원 정책이 지목되고 있다. 이 정책은 결과적으로 수도권 대학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이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는 지역 대학과 수도권 대학 간의 재정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
- 3) 문남철(2021)에서는 남원 소재 서남대학교 폐교 사례를 들어, 지역 경제와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대학 규모의 축소와 함께 지역 사회 또한 구조조정되었다고 표현을 하며, 지역 사회의 공동화(空洞化) 문제점을 살폈다.

창출, 지역 산업과의 연계, 그리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제공은 지역 대학이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주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한상훈 2001; 박종관 2011; 노병만 2012).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 대학의 생존은 단순히 교육적 필요성을 넘어 지역 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지역 대학이 사라진다면, 이는 지역 사회의 경제적·문화적 쇠퇴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역 대학은 지역 주민과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방 정부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지역 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주목받는 것이 대학 간 협력과 공유 모델이다. 특히 대학 교양교육은 이러한 협력의 핵심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교양교육은 학생들에게 단순히 교양 함양과 습득을 넘어, 인격 함양과 비판적 사고, 사회적 책임감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어, 지역 대학 간 협력의 가능성을 높이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지역 대학의 교양교육은 재정적·행정적 지원 부족, 획일적인 교육과정 개편<sup>4)</sup>, 협력 구조의 미비 등으로 인해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간 협력을 통한 교양교육 혁신이 필요하며,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지방 정부는 단순히 재정 지원 기관이 아니라, 대학 간 협력 체계를 조정하고 교양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지방 정부는 대학들이 협력하여 교양교과목을 공동 개발하고, 지역 사회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 간 협력은 교육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양교육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개별 대학이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기 어려운 교과목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은 보다 폭넓은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으며, 대학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나아가, 교양교육은 지역 사회와 대학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가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 정부와 대학 협력을 통해 교양교육의 혁신을 촉진하는 '권역별

4)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교양교육 실태조사(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22)에서 전국 대학의 교양교육이 특정 분야(예: 글쓰기, 영어, 소프트웨어 등)에 집중되면서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보고된 바 있다.

연합 모형'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 및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전북 지역 사례를 분석하여 권역별 연합 모형이 실제 적용될 가능성과 실효성을 평가하고, 대학 간 협력 및 지방 정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모색한다.

## II. 국내외 대학 간 공유·협력 사례 분석

### 2.1. 해외 대학 사례 : MOOC와 대학 간 협력의 선도적 역할

해외 대학들의 공유 및 협력 사례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s)와 유럽연합의 에라스무스 문두스 프로그램(Erasmus Mundus programme)이다.

#### 2.1.1.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s)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s)는 대규모 온라인 강좌 플랫폼으로, 고등교육의 혁신을 선도하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MOOC는 인터넷 기술과 교육의 융합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교육 콘텐츠를 공유하고, 학습자에게 새로운 형태의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2012년, 하버드와 MIT의 협력으로 개발된 edX는 MOOC 플랫폼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손꼽히며, 이를 기점으로 Coursera, Udacity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등장하여 전세계적으로 MOOC의 영향력을 확산시켰다.

MOOC의 등장은 기존의 고등교육 체계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전통적인 대면 교육은 물리적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으며, 특히 교육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고등교육에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고자 MOOC는 인터넷 기반의 개방형 교육 플랫폼을 실현하고자 했다. 또한 대학 간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글로벌 교육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MOOC의 핵심은 강의와 학습 자료의 개방성이다. MOOC 플랫폼에 참여하는 대학들은 강의를 설계하고, 이를 전세계 학습자들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예를 들어, 하버드와 MIT의 edX는 수백 개의 강의를 제공하며,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업 목표와 속도에 맞추어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MOOC는

단순히 강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학생들은 온라인 포럼을 통해 강의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과제를 제출하며, 동료 평가(peer review)를 통해 학습 과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강의를 이수한 후에는 수료증이나 학점을 부여받을 수 있어, MOOC는 개인의 학습 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MOOC의 또 다른 특징은 기술적 혁신이다. 플랫폼은 대규모 학습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학습자의 학습 패턴을 분석하여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안하거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술적 지원은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MOOC는 또한 대학 간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대학 간 협력이 학술 연구와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국한되었지만, MOOC는 강의 콘텐츠를 공유하고 공동 개발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 방식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edX와 Coursera는 여러 대학이 공동으로 강의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글로벌 교육 생태계에서 협력의 중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MOOC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 학자들은 MOOC가 기존 고등교육 체제를 대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전통적인 대학 교육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Dennis, M., 2012). 이는 MOOC의 확산이 대학의 수익 모델과 교육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기존의 대학들이 지역성<sup>5)</sup>을 기반으로 제공하던 교육 콘텐츠가 MOOC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MOOC가 단기적인 열풍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Fischer, G., 2014). MOOC는 수강생의 학습 동기와 이수율에 한계를 보이며, 교수와 학습자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대규모로 진행되는 온라인 강의의 특성상, 개별 학습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MOOC 플랫폼에 참여하는 대학이 증가하면서, 세계 우수 대학들의 강의 콘텐츠가 글로벌 학습자들에게 쉽게 접근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역 대학들은 MOOC와의 경쟁 속에서 기존 교육 프로그램의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쟁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Glenn et al. 2014). 이러한 경쟁적 압박은 지역 대학들에게 질 높은 교과목과

---

5) '지역성'에 대한 개념은 박지윤(2023)을 참조할 수 있다.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공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MOOC는 대학 간 협력과 개방을 촉진하면서도, 각 대학이 자신의 고유성을 유지하고 차별화된 강의를 개발해야 하는 도전을 부여하고 있다.

### 2.1.2. 유럽연합의 에라스무스 문두스 프로그램(Erasmus Mundus Programme)

에라스무스 프로그램(European Region Action Scheme for the Mo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ERASMUS)은 유럽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고, 대학생들의 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대표적인 고등교육 교류 프로그램이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유럽대학들 간의 대학생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1986년에 유럽대학 내에서 타회원국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대학생의 수는 1% 미만이었으며, 이것은 인문주의자인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Erasmus)<sup>6)</sup> 시대(즉, 르네상스 시기)보다도 낮은 대학생들의 유럽대학 간 이동율이었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입안자들은 1992년부터 이동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웠다. 유럽 내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국제 이동성을 촉진<sup>7)</sup>하는 공동체 차원의 실행 프로그램으로, 이후 에라스무스 문두스 프로그램(Erasmus Mundus Programme)으로 발전하였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자유로운 인적 이동을 보장함으로써 국경 없는 고등교육과 노동시장 형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했고, 에라스무스 문두스 프로그램은 유럽 외 지역의 학생들이 유럽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는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의 국제화를 확장하는 형태로, 유럽 외 국가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유럽 대학원 과정에 대한 장학금을 제공하고, 다국적 환경에서의 학습을 통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6) 다수의 선행연구(이세정(2007:48), 홍종열(2011, 111), 동정훈(2014, 137), 양수영, 김수진(2022, 119)에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폴란드의 철학자·신학자이자 인문주의자인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of Rotterdam, 1466-1536)로부터 명칭을 차용하였다(European Commission, Erasmus, <https://education.ec.europa.eu/programmes/llp/erasmus/>)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명칭을 차용하게 된 배경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에라스무스 명칭을 차용한 이유는 르네상스 시대인 에라스무스 시대보다도 대학생 교류 이수율이 낮아 이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7)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참여한 대학들 중 4분의 3은 중앙아시아에서 유럽연합으로, 4분의 1은 유럽연합에서 중앙아시아로 이동하는 등 유럽연합의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 참여국들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학생 간 이동성이 촉진되는 결과(Emerson et al, 2010:75)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유럽공동체 차원의 교육 협력 프로그램이 도입된 배경에는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sup>8)</sup>와 국경 없는 유럽 고등교육 체제 구축 필요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유럽 내 대학 간 학점 인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간 학문적 교류를 촉진하는 제도로 정착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유럽 대학들이 국가별로 운영하던 다양한 학위 제도 및 학점 교류 문제를 보완하고, 공통 기준을 마련하여 국가 간 고등교육 협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의 큰 특징은 유럽 대학 간 학생 이동성 강화 및 학점 인정 시스템의 구축이다. 이는 단순히 교환 프로그램을 넘어, 유럽 내 고등교육의 구조적 통합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시도는 유럽 내에서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유럽 외 지역까지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 12월에는 비유럽 국가들을 포함하는 에라스무스 문두스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도입되었다. 에라스무스 문두스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 대학들은 비유럽 국가의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국제 공동 학위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유럽 고등교육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학생 이동성(mobility)을 넘어, 유럽이 국제 고등교육 중심으로 자리 잡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이 국외 대학 공유사례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이유는 공동체의 교육정책을 중요하게 각인시켰기 때문이다. 기존 유럽 내 대학들의 나라마다 다양한 학위제도와 그로 인한 학점교류 문제, 그리고 기타 고등교육 기관들의 협력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시스템들을 보완시켜, 일정 기준으로 통합하여 서로 교류함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sup>9)</sup> 이는 본 연구에서 후속적으로 논의될 해결 방안 제시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8)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를 통해 유럽 고등교육의 단일화가 추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에라스무스 문두스 프로그램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볼로냐 프로세스는 유럽연합과 다른 유럽 국가들이 대학교육 통합(대학교육의 수렴)을 목표로 실행 중인 계획을 말한다. 이는 교육과정 개혁의 주요 결정 요인이 된다. 볼로냐 프로세스에서는 유럽 전지역을 대상으로 학위의 기준과 품질보장기준을 비교 가능하고, 상호교환 가능하도록 하여 고등교육의 품질보장체제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남궁근 외 2012, 10).

9) 단순히 역내 국가 간의 교수·학생의 이동에 치우치던 유럽 고등교육 협력의 패러다임을 한 차원 확장시켜 유럽대학들의 교육과정과 학사구조 자체를 세계적인 학위구조 변화 추세에 맞추어 통일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고등교육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 2.2. 국내 대학 사례

### 2.2.1.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요구에 맞춰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신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부터 추진된 교육부 주관의 공유대학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존 대학별·학과별로 분절화된 교육 체계를 개선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반도체, 바이오헬스, 실감미디어, 지능형 로봇, 에너지 신산업 등 신기술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육부, 2021). 수도권 대학과 지역 대학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대학별로 부족한 교육 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보다 수준 높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 방향이다.

이 사업은 대학 간 교육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권역별 컨소시엄 운영 방식을 도입하였다. 각 컨소시엄은 수도권과 지역 대학이 포함된 4~7개의 대학이 협력하여 운영되며, 수도권 대학과 지역 대학의 비율이 각각 40% 이상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대학 간 교육 자원 공유를 극대화하고, 단일 대학이 감당하기 어려운 첨단 기술 교육을 협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예를 들어, A대학(수도권)과 B대학(지역)이 공동으로 AI 기반 빅데이터 분석 강의를 개발하여 학생들이 소속 대학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C대학은 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한국연구재단 2023).

이 사업이 도입된 이후 학생들의 학습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6개 이상의 대학이 참여하여 300개 이상의 신규 강좌가 개설되었고, 총 20,000명 이상의 학생이 신기술 교육과정을 수강한 것으로 보고되었다(한국연구재단, 2023). 참여 대학 학생들은 자신의 소속 대학에서 제공하지 않는 교과목을 다른 대학을 통해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이는 기존의 단일 대학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학습 경로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의 교육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중복 투자 비용을 줄이고,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대학 간 협력 모델을 넘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권역별 연합 모형과 유사한 교육 협력 체계를 실험적으로 적용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정부 주도의 대학 협력 모델인 반면, 권역별 연합 모형은 지방 정부가 정책적·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조율을 통해 대학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한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즉,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에서는 대학 간 협력의 틀을 마련하였지만, 지방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방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대학 협력 체계를 강화할 경우, 대학 간 공유 교육 체계가 더욱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 2.2.2. 부울경 교양교육 중심의 공유대학 협력안

부산, 울산, 경남(이하 부울경) 지역 대학들이 협력하여 추진한 부울경 교양교육 공유대학 협력안은 국내 교양교육 협력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 협력안은 대학 간 교양교육의 질적 향상 및 학생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며, 개별 대학이 단독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교양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부울경 지역의 협력안은 재정지원사업이 아니라,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부산가톨릭대학교 외, 2020).

부울경 교양교육 협력안은 2019년 12월 ‘부울경 교양교육협력포럼’ 개최를 시작으로 논의되었으며, 2020년 12월 4일, 신라대학교, 동명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영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5개 대학이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부산가톨릭대학교 외 2020). 협약을 통해 참여 대학들은 각 대학이 보유한 강점 분야를 공유하고, 신규 교양교과목을 공동 개발·운영하며, 교양 교육과정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공동 연구와 교양교육 성과 공유를 위한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5개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양학위제 과정 개발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었다. 이 협력 모델은 개별 대학이 단독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교양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교양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 협력안을 통해 개발된 공동 교과목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0여 개가 개설되었으며, 약 3,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강한 것으로 보고되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3). 이러한 공동 교과목 운영 방식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개별 대학이 보유한 교육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교과목 운영의 중복과 자원 낭비를 방지하는 동시에, 교양교육의 전문성과 차별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부울경 협력안에서는 교양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성과 분석 및 교육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협력 대학들은 정기적으로 교육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목 개편 및 개선 작업을 수행하였다. 부울경 대학 교양교육 협력 성과를 분석한 보고서(강원대학교 KNU교양교육혁신포럼, 2022)에 따르면, 참여 대학들은 매년 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학생 수강 만족도 조사 결과와 학습 성취도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교양교과목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2022년 6개 대학이 추가로 협력에 참여하면서, 교양교육 공동 운영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부울경 교양교육 협력안은 대학 간 협력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도 발전하였다. 지역 기반 강좌를 개설하여 부산의 해양산업, 울산의 제조업 및 에너지 산업, 경남의 전통문화와 연결된 교양교과목을 운영하였다(한국연구재단 2023). 예를 들어, 부산 지역에서는 해양 관련 산업과 연계한 ‘해양 환경과 지속 가능성’ 교과목이 개설되었으며, 울산 지역에서는 제조업과 관광산업을 접목한 ‘문화유산과 지역 발전’ 교과목이 개설되어, 지역과 대학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다. 일부 교과목은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되어, 대학과 지역 사회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부울경 교양교육 협력안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교양교육을 공동 운영하는 하나의 사례로, 교양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했다. 특히, 개별 대학이 단독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교양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학점 교류 및 교육 환류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협력 모델은 대학 간 연계를 통한 교육 혁신이 가능함을 보여주며, 향후 대학 간 협력 방식이 교양교육을 넘어 학위 과정, 연구 협력, 산학 협력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보다 확장된 권역별 협력 모델이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질적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2.2.3. 전남권 교양공동교육

전남권 교양공동교육은 지역 대학 간 협력을 통해 교양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협력 모델이다. 2022학년도부터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를 중심으로 공동 교양교과목이 운영되었으며, 이는 지역의 인문학적 자산과 농업, 해양 산업과 같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양교과목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권역별 연합 모형’의 사례 중 하나로, 지역 대학 간 협력을 통한 교양교육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협력은 교양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두 대학은 2022학년도부터 공동 교양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해 왔으며, 이는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과목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 운영 중인 공동 교양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옷장 속의 세계 시민은

글로벌 이슈, 인권, 평화, 다문화 등의 주제를 탐색하며,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함양하도록 한다. ‘토론과 민주지성’은 토론의 기초적 기술을 익히고 실천 토론을 수행하여 타인과의 공감, 이해, 설득 및 소통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공감의 시대와 반려동물’은 반려동물의 역사적, 사회적, 윤리적 측면을 성찰하며, 공감과 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색채, 문화 그리고 상상력’은 색채 이론과 디자인 원리를 학습하며, 개인의 이미지를 분석하고 창의적 표현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둔다.<sup>10)</sup>

전남권 대학들은 공동 교과목 운영을 통해 지역의 인문·사회·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구축하였다. 농업과 해양 산업이 발달한 전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환경 보호, 농업과 수산업 관련 교양교과목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지역 경제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 향후 지역 기반의 연구 및 취업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공동 교양교과목 운영을 통해 전남권 대학 학생들은 타대학 학생들과 동일한 강의를 수강하며, 학문적 교류와 협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대학별 폐쇄적인 교양교육 구조를 탈피하여, 권역 내에서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학습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남권 대학들은 교양교육을 지역 사회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실습형 교양교과목을 개설하거나, 지역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Problem-Based Learning)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협력 모델은 지역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대학과 지역 사회 간의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전남권 교양공동교육은 대학 간 협력을 통해 교육 혁신을 도모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지만, 여전히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공동 교과목의 운영과 평가 기준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각 대학별 학사 구조 및 평가 방식의 차이로 인해, 공동 교과목 운영 시 일부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

10) ‘ؤ장 속의 세계 시민’은 글로벌 이슈, 인권, 평화, 다문화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태도를 갖는 세계 시민 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토론과 민주지성’은 토론의 방법적 기초 학습, 실천 토론을 수행하여 타인을 공감, 이해, 설득, 소통하는 능력을 목적으로 전남대에서 개설된다. ‘공감의 시대와 반려동물’은 반려동물에 관한 역사적, 사회적, 윤리적 성찰 시도하며 공감의 시대에 필요한 소통의 자세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색채, 문화 그리고 상상력’은 색채에 대한 이해와 적용 실습, 퍼스널 이미지를 분석하고 이미지에 맞는 메이크업, 연출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조선대에서 개설된다.

요구된다.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조율이 필수적이다. 현재 대학 간 협력 사업은 개별 대학의 주도적 노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며, 이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지방 정부 및 교육 당국의 지원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권역별 연합 모형’과 연계하여 볼 때, 전남권 교양공동교육 사례는 지역 대학들이 협력하여 교육 자원을 공유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양교육을 개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대학 간 협력은 단순히 자원 공유 차원을 넘어, 지역 사회 및 산업과 연계된 교육 모델로 확장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양교육의 사회적 가치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2.4. 사이버대학·원격교육

고등교육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원격교육 및 사이버대학을 활용한 대학 간 교육과정 공유 모델이 중요한 논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지역 대학 간 협력과 권역별 연합 모형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원격교육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대학 간 학점 교류 및 교육 자원의 공동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하는데 기여한다(교육부, 2023).

현재 한국의 원격교육 협력 모델 중 대표적인 사례로 KCU(한국가상대학연합)와 SDU(서울디지털대학교 연합대학)를 들 수 있다. KCU는 1997년 설립된 이후 현재 80여 개 대학이 회원교로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격교육 기구로, 회원교 간 학점 교류를 지원하며, 70만 명 이상의 학생이 인터넷과 위성을 통해 수업을 듣고 있다. KCU는 다양한 교양 및 전공 강의를 제공하며, 기존 대학의 교양교육 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한국가상대학연합, 2022). 또한, SDU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강의 수강과 학점 이수를 통해 대학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모델을 운영하며, 직장인과 성인 학습자들에게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대학의 모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떨어지고 평가의 공정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원격교육 및 사이버대학의 활용은 지역 대학 간 협력 및 권역별 연합 모형과의 접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기존의 교양교육 모델과 융합될 경우, 지역 대학 간의 학점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고, 개별 대학이 감당하기 어려운 교과목 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북권 대학들은 원격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대학의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향후 권역 내 대학들이 연합하여 교양교육 과정을 공동 운영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원격교육 및 사이버대학 기반의 대학 간 협력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먼저, 학점 교류 과목의 학사 인정 범위와 행정 절차가 대학별로 상이하여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일부 대학에서는 원격 강의로 이수한 학점을 정규 학위 과정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원격교육을 통한 대학 간 협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교육부 2022). 또한, 기존 대학의 교양교육 체계와 새로운 형태의 협력 모델을 통합하려는 시도는 학사 구조와 교과목 체계의 개편을 필요로 하며,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표준화된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수반한다.

결론적으로, 원격교육과 사이버대학을 활용한 대학 간 협력 모델은 지역 대학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권역별 연합 모형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대학 간 행정적·제도적 조율이 선행되어야 한다.

### 2.3. 대학 간 공유·협력 등장 배경

다음으로는 대학 간 공유·협력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여러 대학에서 고등교육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써 대학 간 공유·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후 논의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대학 간 협력과 공유는 최근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4차 산업혁명, COVID-19 팬데믹, 학령인구 감소 등의 구조적 변화는 대학 교육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교육 자원 부족, 교양교육 혁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대학 간 협력 모델은 지속 가능성과 체계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보완할 새로운 협력 방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권역별 연합 모형’은 기존 협력 모델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대학 간 협력을 보다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

먼저, 살펴볼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전환’이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적 혁신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2016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2016)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으며, 이 시점부터 4차 산업혁명은 학계와 산업계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의 역할에도 근본적인 재정립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4차 산업혁명 대응 대학혁신 지원방안'(2019)을 발표하였으며, 학문 간 융합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고등교육 체계를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융합형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나, 개별 대학이 단독으로 이러한 혁신을 수행하는 데에는 재정적·인적 자원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교육부(2023)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관련 전공 개설이 수도권 대학에 65% 이상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 대학들은 신기술 관련 교육 인프라와 교수진 확보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간 협력을 통해 교육 자원을 공유하고,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체계적 협력 모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신기술이 발전할수록 비판적 사고, 윤리적 판단, 융합적 사고와 같은 교양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대학 차원이 아닌 협력 기반의 교양교육 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권역별 연합 모형'은 신기술과 교양교육을 균형적으로 운영하는 협력 체계로서 기능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공유대학' 개념의 등장과 확산이다. '공유대학'이라는 개념은 제2회 서울총장포럼(2015)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논의되었으며, 당시 서울 소재 대학들은 교환학생 프로그램, 도서관 자료 공유 등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공유대학'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는 대학 간 협력을 통해 물리적·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며,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특히, 지역 대학은 수도권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의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자생적인 협력 모델로 확산되며, 미래 고등교육에서 공유와 협력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팬데믹으로 인한 뉴노멀의 등장이다. COVID-19 팬데믹은 고등교육 환경에 급격하고도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왔다. 전세계적으로 강제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학습은 고등교육의 형태를 기존의 대면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뉴노멀(New Normal)이라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형성하였고, 이는 대학 간 공유와 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COVID-19 팬데믹을 교육 생태계의 대전환을 촉진하는 주요 계기로 지목했다. 고등교육 기관들은 빠르게 원격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강의와 비대면 학습 플랫폼을 채택하였다. 특히, Zoom, Google

Classroom, Microsoft Teams와 같은 디지털 도구는 대학의 학습 환경을 재정의하는 핵심 매개체가 되었다.

COVID-19 팬데믹은 대학 교육의 온라인 전환을 가속화하며, 대학 간 협력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2020년 이후 한국 대학의 온라인 강의 비율은 급격히 증가했으며, 교육부(2021)에 따르면, 전국 대학의 원격 수업 비율이 2019년 5%에서 2020년 85%로 증가했다. 이를 계기로 국내 대학들은 원격교육과 학점 교류 시스템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협력 모델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이는 '공유대학' 개념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대학 간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협력 방식이 도입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원격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대학 간 협력 모델은 일부 대학에 한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권역별 연합 모형'은 기존 원격교육 및 학점 교류 모델을 확장하여, 권역 내 대학들이 보다 체계적인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학 간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또 다른 배경은 학령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역 대학의 위기이다. 한국교육개발원(2023)의 보고서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2024년 이후 지역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평균 80%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지역 대학의 경우 50% 이하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위기는 대학 재정 악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및 사회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 대학의 쇠퇴는 곧 지역 청년 인구의 유출로 이어지며,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학 간 협력을 통해 대학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교육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유대학 개념의 확산과 대학 간 협력 모델의 발전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 협력 방식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협력 모델은 특정 대학 중심의 네트워크로 운영되거나, 정부 재정 지원에 의해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학 간 협력이 개별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지방 정부와의 연계를 통해 이를 강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권역별 연합 모형'은 기존 협력 모델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대학 간 공유와 협력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될 것이다.

## Ⅲ. 지방 정부와 대학의 권역별 협력 :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 모델

### 3.1. 권역별 접근의 필요성

권역별로 대학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 고등교육 환경에서의 지리적, 재정적, 정책적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대학의 위기는 단순히 대학 간 경쟁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필요로 한다. 권역별로 대학 협력을 하는 것은 개별 대학이 감당하기 어려운 교육, 연구, 산학협력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내 대학들이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첫째,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협력 구조를 제공한다. 권역 내 대학 간 협력은 물리적 거리의 장점을 살려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과 공유를 용이하게 하며, 공동 강의 개설, 학점 교류, 도서관 및 연구시설 공동 활용 등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둘째, 지역 산업 및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각 지역 대학들은 해당 권역의 산업 특성과 연계된 전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지역 산업체와 공동으로 설계된 교과목과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직업 준비 능력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와 대학 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한다.

셋째, 정책적 일관성과 지원 확보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예: BK21 플러스, LINC+)은 점차 권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특히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권역별 대학 협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권역별 협력 모델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대학 간 협력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가 정책적·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조율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개별 대학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첨단 기술 교육,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를, 국제 교류 등의 과제를 권역 내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 3.2. 권역별 연합의 세 가지 유형

한국 고등교육에서 권역별 협력은 크게 거점형, 대학연합형, 특성화형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부산가톨릭대학교 외 2020).

### 3.2.1. 거점형

거점형은 참여 대학 중 교양교육 거점대학을 두고 그 거점대학 중심의 교양교육 체계와 플랫폼을 추구하는 형태다. 참여 대학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운 ‘공통 교육과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한 대학이 ‘거점대학’이 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교양교육 공유대학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리하며 교양 교육과정 개발을 주도하는 형태다. 거점대학이 중심이 되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른 대학들이 이를 활용함으로써 지역 내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예를 들어, 경남 USG 사업은 이러한 거점형 모델의 대표 사례이다. 이 사업에서는 거점대학이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하여 교양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교육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지역 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서 다양한 교육 관계자들의 요구 수렴 및 다양한 요구를 교육 전반에 반영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어서 지역 산업체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참여가 필수 조건이 되는 것이 필요한데, 교양교육의 입장에서는 기존 행정, 재정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거점 국립대가 중심이 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기 때문에 지역 사립대가 이러한 과제를 추진하기에는 제한적이다.

### 3.2.2. 대학연합형

대학연합형은 각 대학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공동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협력 모델이다. 이 모델은 학점 교류와 공동 강의 개설을 통해 학생들에게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8년 서울시에서 시작하여 24개 대학이 약 1,600개 학점 교류 과목을 진행한 적이 있다. 그러나 행정적 복잡성과 학점 이수 체계의 차이로 인해 운영이 중단되었다. 이 경험은 대학연합형 모델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관리와 표준화된 규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공통 플랫폼을 구축,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 대학별 졸업 이수 체계가 달라서 학점 교류 과목에 대한 이수 인정 범위 등의 행정적 문제가 있다는 점, 또한 각 대학들 간 시스템이 연동되어야 하는 등의 문제들이 있다.

### 3.2.3. 특성화형

특성화형은 각 대학의 전문화된 영역과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하는 모델이다. 예를 들어, 특정 대학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면, 해당 대학은 관련 교과목을 다른 대학들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심화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모델은 대학별로 개설하기 어려운 특화된 영역을 보완하는데 유용하며, 권역 내 대학들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참여 대학들이 각 학교의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지 않고도, 각 대학의 특성화 영역의 교육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고, 대학별로는 개설하지 못한 영역을 보완하여 교육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점형과 대학연합형의 절충 형태로 볼 수 있다.

### 3.3. ‘권역별 연합 모형’ 제안

기존 선행 연구에서 논의한 각 유형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절충한 새로운 모델로, ‘권역별 연합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권역별 연합 모형’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학들이 중심이 되어 교육 자원의 공동 활용, 학문적 협력, 교양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협력 방식이다. 특히 이 모델은 단순히 학점 교류나 공동 강의 개설을 넘어, 지역 산업 및 지방 정부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리고 대학 간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지방 정부는 권역 내 대학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산업체와의 연계를 증대함으로써, 대학 협력이 지역 경제와 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권역별 형태가 나타나게 된 데는 다음의 이유에서 연유한다고 본다. 1995년 이후 진행된 다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정부는 대학들이 협력을 기반으로 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해 왔다. 2018년 교육부가 운영했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국립대학혁신사업(PoINT), 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ACE+), 대학특성화사업(CK),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PRIME),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여성공학인재 양성사업(WE-UP),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LINC+), 그리고 BK21플러스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정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2018년에 진행된 ACE, CK, PRIME, CORE, WE-UP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해 대학기본역량 진단을 통과한 모든 대학에 포괄러 펀딩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대학 간 협력 및 공유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평가 방식을 전환하였다(교육부, 2020). 이 과정에서

대학들은 정부의 평가 체계 및 재정지원 방식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권역 내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이 권역별 평가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대학들은 자연스럽게 동일 권역 내에서 협력과 공유를 활성화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대학들이 정부의 지원 체계 및 평가 방식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권역 중심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권역별 연합은 대학 간 중복 투자 방지, 교육 자원의 효율적 활용, 지역 산업 및 사회와의 연계를 고려한 협력 모델로 자리 잡았으며, 교양교육 분야에서도 이러한 연합 구조를 기반으로 공동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림 1〉 대학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출처 : 교육부, 2019)

### 3.4. ‘권역별 연합 모형’ 공유·협력 국내 사례

한국의 고등교육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대학 간 협력 모델이 지역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대학들은 단독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권역별 연합 모형을 활용한 대학 간 협력과 교육 자원의 공유가 중요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협력 모델은 개별 대학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존하거나, 단기적인 정부 지원 사업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대학 간 협력 모델이 단순히 학점 교류나 공동 강의 개설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지방 정부가 수행할 때 협력 모델의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대학 간 협력은 개별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일정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대학 간 학점 교류와 공동 교육과정 운영은 효과적인 협력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지만, 대학별 평가 방식과 졸업 요건의 차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지방 정부는 대학 간 학점 교류를 표준화하고, 교과목 운영 방식을 조율하며,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학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럽연합이 시행한 볼로냐 프로세스는 국가 간 학점과 학위 체계를 표준화하여 유럽 내 대학 협력을 촉진한 대표적인 사례로, 대학들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대학 간 협력 모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는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대학 간 협력 모델은 초기 구축 단계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며,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LINC 3.0 사업이 대학과 지역 산업을 연결하는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대학들이 산학협력 중심의 교육 모델을 도입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를 강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LINC 3.0과 같은 정부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대학 간 협력이 지역 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방 정부가 대학 간 협력을 위한 예산을 직접 배정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경우 협력 모델이 단기적인 시도를 넘어 장기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

대학 협력 모델이 지역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지방 정부는 대학과 지역 산업 간의 협력을 증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대학 협력이 산업과 연계되지 않으면 협력 모델이 단기적인 교류 수준에서 멈출 가능성이 크며, 궁극적으로 대학과 지역 경제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가 대학과 산업체 간의 중개자 역할을 해야 한다. 대학 간 협력이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별 대학이 독립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 정부가 이를 조정하고 산업체와 연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지방 정부가 대학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강원권, 부울경, 전북권 사례를 비교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강원권에서는 2022년 7월 강원권 대학 교양교육 협의회가 개최되면서 지역 대학 간 교양교육 공유 및 협력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강원도 내 15개 대학 중 9개 대학의 교양교육 기관장 및 실무자가 참여한 이 협의회에서는 교양교육 협력을 위한 공통 목표를 설정하고, 권역 내 대학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후 2022년 11월 제2차 교양교육 협의회에서는 강원권 대학들의 교양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협력 가능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해당 조사는 각 대학의 교양교육 목표, 교과과정 편성 방식, 운영 체계, 질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여, 강원권 대학들이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공통 과제를 도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강원권 사례에서 나타나는 주요 문제점은 지방 정부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점이다. 대학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초기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실행 단계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하여 협력 모델이 장기적으로 정착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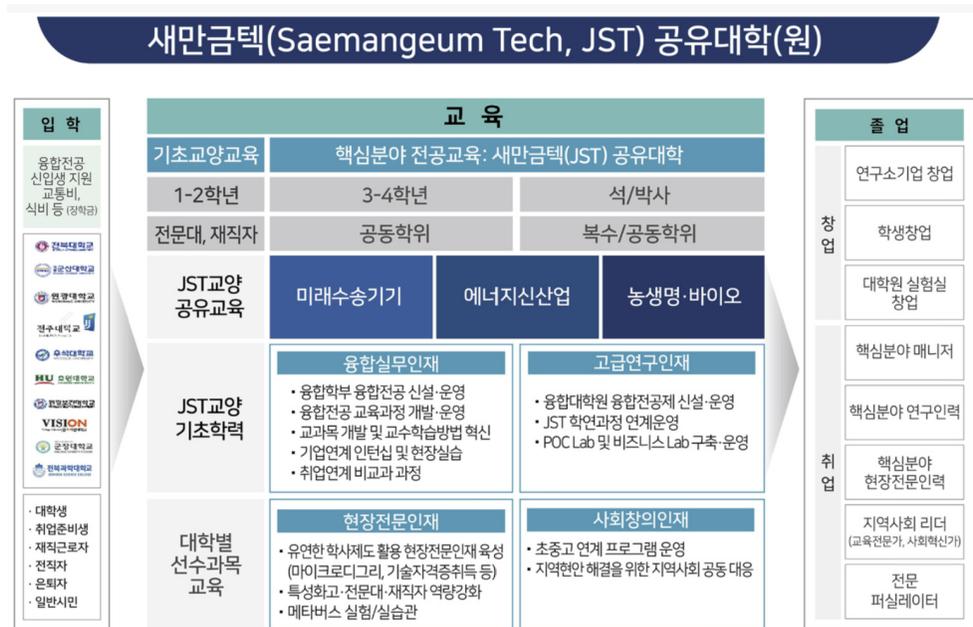
부울경 권역에서는 2020년 부산지역 사립대학 간 교양교육 협력 협약이 체결되면서 권역 내 대학 간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협약을 기반으로 2021년에는 대학 간 공동 연구를 통해 교양교육 협력의 전략이 수립되었으며, 2022년부터는 시범 운영이 진행되었다. 시범 운영 단계에서는 공동 교양교과목 개설과 교육과정 운영 방안이 검토되었으며, 학생들의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적합성이 평가되었다. 이후 2023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되었으며, 부울경 지역의 산업 및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교양교육 콘텐츠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부울경 권역 또한 대학 간 협력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착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포럼을 통해 협력 대학들이 교육 성과를 공유하는 활동은 이루어졌으나, 대학 간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개별 대학의 독립적인 운영 체계, 행정적 절차의 차이, 권역 내 대학 간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전북권 JST 공유대학 사례는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대학 협력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전북특별자치도 JST 공유대학은 ‘도내 대학, 지자체, 연구기관, 산업체 등이 협업하여 지역에 특화된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온라인 플랫폼 형태의 가상 대학’이다.

전북도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을 통해 시행되는 플랫폼 형태의 공유대학이다. 지역 핵심산업분야 기업 수요에 맞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북새만금텍(JST) 공유대학’에 함께 한다. 공유대학은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전주대, 우석대,

호원대, 원광보건대, 전주비전대, 군장대, 전북과학대 10개 대학이 참여하고 지역 인재를 키우기 위해 만든 대학이다. 2024학년도 1학기에 3개 융합학부 9개 융합전공이 개설되었다. 모집과정은 전공심화과정과 기초전공과정으로, 전공심화과정은 미래수송기기학부 90명(친환경모빌리티 30명, 스마트모빌리티SW 30명, 특수목적 수송기기 30명), 에너지신산업학부 90명(이차전지 30명, 수소에너지 30명, 재생에너지 30명), 농생명·바이오학부 90명(디지털농업 30명, 푸드테크 30명, 메디컬·바이오 30명)으로 총 270명이다.

기초전공과정은 전문대 및 일반대 비이공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미래수송기기학부 20명, 에너지신산업학부 20명, 농생명·바이오학부 20명 총 60명을 선발한다. 전공심화과정 지원 자격은 원소속대학에서 4학기 이상 이수자 또는 이수 예정자로 신청학기 직전까지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하고, 기초전공과정은 별도 지원 자격은 없다. 강의 수강 및 수강 신청은 학사관리시스템(LMS)을 이용하고, 학생들의 원활한 참여 유도를 위해 수시 수강 안내를 한다. JST 공유대학에 참여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교과목 이수 학점과 프로그램 수수료 횡수에 따라 200만원, 120만원, 80만원 등 혁신인재지원금 및 혁신인재장학금을 지급한다.



〈그림 2〉 JST 공유대학 운영체계(출처 : JST 공유대학 홈페이지(<http://www.jst.ac.kr>))

JST 공유대학은 전북도 지방 정부의 지원 아래 권역 내 대학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력 모델이다. 전라북도청과 전북테크노파크, 전북 지역 대학들이 협력하여 구축한 이 모델은 대학 간 학점 교류, 공동 교육과정 운영,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지역 산업 연계 등을 포함하는 전북권 특화 협력 모델이다. 특히 전북도는 JST 공유대학 운영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여 교수 인건비, 온라인 플랫폼 구축,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 협력 모델이 단기적인 시도를 넘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지방 정부의 행정적 조율, 재정적 지원, 산업 연계가 결합될 때 대학 간 협력 모델이 단순히 교류 수준을 넘어 지역 사회와 연결된 지속 가능한 교육 체계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대학 협력이 단기적인 프로젝트에 그치지 않고, 지역 대학과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학 간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북권 공유대학은 대학과 학과의 장벽을 뛰어넘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 새로운 교육혁신 모델로 꼽힌다. 공유대학을 통해 대학은 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전북도는 기업을 유치해 새로운 미래산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와 대학 간의 협력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학 간 협력 모델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체계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다. 강원권과 부울경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 간 협력은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할 경우 협력이 일시적 시도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전북권 JST 공유대학 사례는 지방 정부가 대학 협력의 주요 조정자로서 행정적 조율, 재정적 지원, 산업 연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때 협력 모델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 정부는 대학 간 협력을 단순히 학점 교류와 공동 강의 개설 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교육과정 개발과 지역 산업 연계까지 확대하여 지역 사회와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 협력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역 대학들이 교육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역 사회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 간 협력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 정부가 단순히 지원 기관을 넘어 적극적인 협력 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재정적·행정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 IV. 다시 교양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하여

### 4.1. 교양교육의 본질과 현대적 역할

교양교육은 인류 문명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교육적 가치 중 하나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교양교육을 단순히 지식 습득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도덕적·정치적·사회적 자질을 함양하는 과정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개념은 로마 시대를 거쳐 중세 대학의 교육 체계로 이어졌다. 특히, 중세 대학에서는 문법, 논리학, 수사학, 산술, 기하학, 음악, 천문학으로 구성된 7자유교과를 필수 교육 과정으로 설정하여 학문의 기초를 다지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근대 대학이 형성되면서 학문이 세분화되고 실용적·전문적 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교양교육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20세기에 들어와 다시 변화하기 시작했다.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학문 간 융합이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교양교육의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었고, 대학은 비판적 사고, 창의성, 도덕적 성찰과 같은 핵심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한국 대학에서도 교양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교양교육은 특정 전공과 실용 학문 중심으로 편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학들이 취업률과 실용적 기술 습득을 강조하면서 교양교육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거나, 교육과정에서 부수적인 역할로 전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학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교양교육이 단순히 기초 교과목으로 인식되거나,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면서 교육의 질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양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학 간 협력을 통한 공유·연계형 교양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 간 협력을 통한 교양교육 혁신은 단순히 학점 교류를 넘어,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대학 간 협력을 통해 교양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지역 내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방식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각 대학이 보유한 교육 자원과 지역적 강점을 반영한 차별화된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특정 지역이 전통문화 및 예술 자원이 풍부하다면, 대학들은 이를 기반으로 한 융합형 교양교과목을 공동 개설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산업과 밀접한 지역에서는 대학 간

협력을 통해 현장 기반 교양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접근은 교양교육이 단순히 지식 전달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돕는다.

대학 간 협력 모델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지방 정부는 대학 간 공동 교양교과목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교원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 온라인 공유 교육 플랫폼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협력 모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대학 간 학점 교류 및 교육과정 연계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문적 기준을 일치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들은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교육 혁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보다 다양한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 대학의 경우 교양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대학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 수도권 대학에 비해 교육 자원과 교과목 선택의 폭이 제한적인 지역 대학들은 권역별 협력을 통해 교양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강원권과 부울경 지역에서는 대학 간 협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었지만, 지방 정부의 개입이 미흡하여 지속적인 협력 체계가 정착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반면 전북권에서는 JST 공유대학을 통해 지역 대학들이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양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 시도를 하고 있다. JST 공유대학 모델은 특정 지역 내 대학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첨단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는 지방 정부가 대학 협력의 주요 조정자로서 행정적 조율, 재정적 지원, 산업 연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때 협력 모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대학 간 협력 모델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체계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다. 대학 간 협력은 단순히 학점 교류와 공동 강의 개설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 교육과정 개발과 지역 산업 연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 정부는 단순히 지원 기관을 넘어 적극적인 협력 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재정적·행정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교양교육이 단순히 기초 학문 교육이 아니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필수 교육 과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의 교양교육은 개별 대학 차원에서 운영될 경우 자원의 한계, 교육과정의 중복성, 교육의 질적 차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지역 대학의 경우 교양교과목

개설의 폭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 제한적이며, 이에 따라 학생들은 충분한 학습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간 협력을 통해 교육 자원을 공유하고, 보다 체계적인 연계형 교양교육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4.2. 대학 간 협력을 통한 교양교육 혁신 방안

대학 간 협력을 통한 교양교육 혁신은 교육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현재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은 대학별로 개별 운영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역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교양교과목 개설의 폭이 제한적이며, 이에 따라 학생들은 충분한 학습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간 협력을 통한 공유·연계형 교양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대학 간 협력 모델은 크게 교육과정 공유, 교강사 교류, 학점 교류 확대, 그리고 온라인 기반 교육 연계라는 네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첫째, 대학 간 교육과정 공유를 통해 다양한 교양교과목을 공동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특정 대학이 강점을 가진 교과목을 공동 개설하여 여러 대학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중복 개설을 방지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지역 내 대학들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으로 교양교과목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학문적 융합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교강사 교류를 활성화하여 대학 간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정 대학에서 우수한 교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하거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은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대학 간 학문적 교류를 촉진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협력 모델은 특히 지역 대학의 강점이 될 수 있으며, 수도권 대학과 지역 대학 간의 교강사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셋째, 학점 교류 확대를 통해 대학 간 교육 연계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부 대학들 사이에서 학점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점 인정 기준이 대학마다 다르거나, 교류 가능한 교과목 수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학점 인정의 표준화와

제도적 준비를 통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대학 간 교양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권역별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한 학점 교류 확대는 대학 간 경쟁을 완화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넷째, 온라인 기반 교육 연계를 활성화하여 물리적 거리와 대학 간 교육 자원 차이를 극복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원격 교육과 학습 플랫폼의 발전으로 인해 온라인 기반 협력 모델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예를 들어, JST 공유대학은 지역 대학 간 연계 교육을 통해 교양교과목을 공동 개설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대학 간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협력 모델은 강원권과 부울경 지역에서도 논의되고 있으며, 일부 대학들은 공동 교양교과목 개설, 학점 교류, 교강사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 간 협력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JST 공유대학과 같은 온라인 기반 교육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면 특정 대학에 개설된 강의를 타대학 학생들도 수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보다 다양한 교양교과목을 선택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러한 온라인 교육 연계 모델은 특히 지역 대학 학생들에게 수도권 대학 수준의 교양교육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대학 간 협력을 보다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대학 간 협력 모델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와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대학 간 협력 체계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경우 초기 단계에서는 활성화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방 정부는 대학 간 공동 교양교과목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공유, 교강사 교류를 위한 정책 마련, 학점 교류 확대, 온라인 공유 교육 플랫폼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협력 모델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대학 간 협력을 통한 교양교육 혁신은 단순히 교육과정을 공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들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의 교육 목표를 설정하며,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대학들은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며, 학생들에게 보다 경쟁력 있는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오늘날 한국의 고등교육은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현상, 지역 대학의 위기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지역 대학은 학생 모집의 어려움, 교육 자원 부족,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 간 협력과 공유 모델은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간 협력을 통한 교양교육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교양교육은 학문 간 융합과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는 중요한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지역 대학은 수도권 대학과 비교할 때 교양교과목 개설의 폭이 좁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제한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교양교육을 공유하고, 보다 효율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 간 협력 모델은 교육과정 공유, 교강사 교류, 학점 교류 확대, 온라인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이러한 협력 모델은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학 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교육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양교육 공유 모델은 물리적 거리의 제약을 극복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으로 주목된다.

이러한 대학 간 협력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로 전북권 JST 공유대학이 있다. JST 공유대학은 지역 대학 간 연계를 통해 교양교과목을 공동 개설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협력 모델은 강원권과 부울경 지역에서도 논의되고 있으며, 일부 대학들은 공동 교양교과목 개설, 학점 교류, 교강사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 간 협력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대학 간 협력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와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대학 간 협력 체계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경우 초기 단계에서는 활성화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 정부는 대학 간 공동 교양교과목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교강사

교류를 위한 정책 마련, 온라인 공유 교육 플랫폼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협력 모델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학점 교류 및 교육과정 연계를 표준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학 간 협력을 통한 교양교육 혁신은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학들은 단순히 자원 공유를 넘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의 교육 목표를 설정하며,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 기반 교육 연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대학과 수도권 대학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균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대학 간 협력과 교양교육 혁신이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임을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대학 간 협력 모델이 보다 활성화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지역 대학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대학 간 협력 모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역별 연합 모형’이라는 새로운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기존 연구들이 대학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쳤다면, 본 연구는 실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지방 정부의 역할을 포함하여 보다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교양교육을 중심으로 대학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탐구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권역별 연합 모형’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추가로 분석하고, 실증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협력 모델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양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원대학교. 2022. 제3회 KNU 교양교육혁신포럼 자료집. 강원대학교 교양교육원.
- 교육부. 2019. 4차 산업혁명 대응 대학혁신 지원방안. 교육부.
- 교육부. 2020. 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 1, 2유형 기본계획. 교육부.
- 교육부. 2021.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기본계획. 교육부.
- 교육부, 2022. 2022년도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기본계획. 교육부.
- 교육부. 2023.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방안. 교육부.
- 남궁근, 손명구, 노종호, 김상묵, 김소영. 2012.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럽연합(EU)의 대학개혁정책 평가 - 대학 현대화 아젠다의 교육과정 개혁 및 거버넌스 개혁의 성과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분석. 한국연구재단(NRF).
- 노병만. 2012. 지방대학 침체의 원인과 활성화방안. 대한정치학회보 20(1), 323-350.
- 대학교육연구소. 2020.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 대학 육성 방안. 대학교육연구소.
- 동정훈. 2014. 유럽연합 교육정책 분석을 통한 한-EU 간 교육협력 증진 방안 모색. 연세유럽연구 3(1), 130-146.
- 문남철. 2021. 대학폐교가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남원서남대학교를 사례로. 국토지리학회지 55(3), 261-274.
- 박종관. 2011. 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 천안시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1(6), 360-371.
- 박지윤. 2023. 사회적 지역성에 내포된 담화표지와 지역정체성 형성 연구. 지역사회 현안과 담론 22, 45-67.
- 부산가톨릭대학교, 동명대학교, 신라대학교, 영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2020. 부울경 교양교육 협력 협약서. 부산가톨릭대학교 외.
- 서울총장포럼. 2015. 제2회 서울총장포럼: 비욘드 코리아-새로운 성공 방정식. 서울: 서울총장포럼.

- 양수영, 김수진. 2022. 유럽연합(EU) 대학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의 평가와 과제 -스페인 사례를 중심으로. EU연구 61, 115-142.
- 염민호. 2020. 대학 보직자가 생각하는 지역혁신과 지방대학 역할 이해. 교육행정학연구 38(4), 215-248.
- 이세정. 2007. EU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I) - 유럽연합.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가상대학연합. 2022. 제1회 대학 원격교육 우수사례집. 한국가상대학연합.
-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22. 대학 교양기초교육원의 표준 모델. 한국교양기초교육원.
- 한국교육개발원. 2023. 지방대학의 위기와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3. 한국 대학의 교양 기초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실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연구재단. 2023. 혁신공유대학 사업의 성과 분석 및 발전 방향 연구. 한국연구재단.
- 한상훈. 2001. 지역사회발전에 관한 지역대학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영남지역발전연구 28, 129-152.
- 홍종열. 2011. EU의 문화정책 아젠다 속에 나타난 글로컬라이제이션. 인문콘텐츠 20, 103-120.
  
- Dennis, M. 2012. Information literacy: Using computers to connect practice to evidence. New York, NY: Springer.
- Emerson, M., Boonstra, J., Hasanova, N., Laruelle, M. and Peyrouse, S. 2010. "Into EurAsia: Monitoring the EU's Central Asia Strategy. Center for European Policy Studies (CEPS): Brussels.
- Fischer, G. 201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LC-MS/MS method for assessment of an anti-inflammatory indolinone derivative by in vitro blood-brain barrier models. Journal of Pharmaceutical Analysis 4(3), 120-128.
- Glenn, J. C., Gordon, T. J., & Florescu, E. 2014. 2013-14 State of the Future (Vol. 1). The Millennium Project.

- World Economic Forum, 2016. The future of jobs - Employment,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orld Economic Forum.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https://education.ec.europa.eu/programmes/llp/erasmus/>
- JST 공유대학. <http://www.jst.ac.kr>

● 투고일: 2025.01.21. ● 심사일: 2025.01.23. ● 게재확정일: 2025.02.16.

| Abstract |

**A Study on the Potential of Local Government and University Collaboration for Liberal Arts Education Innovation: Proposing a Regional Consortium Model**

Park Jiyoon (Woosuk University)

This study proposes the potential for liberal education innovation through the collabo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universities and discusses strategies for regional universities to establish a sustainable cooperative model. With declining student populations and an increasing concentration of educational resources in metropolitan areas, regional universities face structural challenges that threaten their competitiveness. In response, this study proposes a Regional Consortium Model, which enables universities to collaborate in sharing educational resources, developing joint curricula, and obtaining sustainable support through partnerships with local governments. By analyzing the case of the JST Shared University in Jeollabuk-do, this research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university collaboration and highlights the crucial role of local government involvement in ensuring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such models. University collaboration must go beyond simple credit exchange and evolve into a higher education model that integrates with regional communities. Through such an approach, regional universities can not only enhance their viability and development but also contribute to the overall sustainability of higher education in South Korea.

〈Key words〉 Regional Consortium Model, Local Government, Regional University, Inter-University Collaboration, JST Shared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